

전북 선도기업 20개사 선정

도, 해전산업·위캔글로벌·천지연농업회사법인 등

전북도는 도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전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올 전북도 선도기업 20개사를 신규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해전산업(주) ▲위캔글로벌(주) ▲천지연농업회사법인(유) ▲(주)리뷰터 ▲고려자연식품(주) ▲(주)엘지스 ▲(주)다이코 ▲(주)풍림과 마텍 ▲(주)성현 ▲울진공업(주) ▲(주)에이유이 ▲(주)유리비앤비 ▲(주)그린맥스 ▲한국프라이미제약(주) ▲(주)정석세미칼 ▲(주)세웅 ▲(주)아이엠 ▲(주)더블유제이 이엔에스 ▲(주)새는 ▲(주)아이엠시티이며, 기존에 선정된 59개사를 포함하

여 총 79개사가 선도기업으로 지정 관리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및 허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1~1.5억원 이내), 현장바로 공정개선(3~5,000만원 이내), 마케팅(2,000만원 이내), 컨설팅(2,000만원 이내)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5.33%(전국 0.73%, 전북제조업 0.21%)

증가, 구인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119명이 채용되는 등 매출성장이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온 결과 총 17개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어 중견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 있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선도기업과 같은 도내 허리역할을 해줄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여 침체된 전북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제10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6일 송상준 직무대리 부의장 등 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4년간의 의정 마무리

834건 안건 처리

전주시의회가 26일 열린 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0대 전주시의회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총 40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총 8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380회의 시장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정책 점검 및 미

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건의안'과 '화폐수급업무 재개 촉구 건의안',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 환영논평' 등 40여건의 건의안 및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다.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와 의정포럼 '함께배움', '전주비전연구회'

등을 통해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비교견학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준 부의장은 폐회식에서 "지난 4년간 전주시의회에 보내주신 66만 전주시민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제10대 전주시의회에서도 '달리는 말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蹄蹄)의 정신으로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의원 당선자 의정설명회

의회운영사항 등 안내 지역발전 앞장 다짐 내달 2일 첫 임사회

전북도의회는 26일 제11대 의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자 설명회를 했다.

이날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당선자들의 자기소개에 이어 이지성 사무처장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각오를 다졌다. 설명회를 마친 뒤 당선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원실, 도서관 등 의회 청사를 둘러봤다.

양용모 제10대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바람을 하나로 모아서 전북의 가치를 넘어 전북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제11대 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 회복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7월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1대 도의회 첫 회기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3시30분 개원식을 갖는다.

/김진성 기자

'대한민국명장'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300만원

정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부여하는 '대한민국명장'이 아님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숙련기술장려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계, 금형, 전기 등의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하고 있다.

대한민국명장은 1986년부터 매년 10~20여명이 선정돼 현재는 총 627명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한반도 신경제구상 새만금 역할과 활용방안은?

전북도, 새만금 정책포럼... 부지 활용 남북경협단지 조성 등 제시

전북도는 26일 새만금 정책포럼을 열어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의 주요 인사로 구성되어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 지원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있어 새만금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으로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에 새만금이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이 제시됐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원활해 경제벨트는 북측의 개성, 평양, 남포, 신의주, 남측은 수도권, 평택, 목포까지, 국외로는 라오닝성과의 연결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특구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지만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 역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소외 될 수 있는 새만금의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했다.

먼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활용하여 북측 인력공급과 남측 부지제공 및 자본참여 등 새로운 남북경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활용한 동북아 슈퍼리드의 핵심거점과 국가간 협력 R&D 사업 추진 및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구축하며,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농생명분야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고, 새만금항~대야철도와 서해안 남북철도를 연결하여 서해안 물류 및 교류협력 기반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한후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단일시장 등을 고려할 때, 항만과 공항은 필수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배후지역 활성화 전라북도 농생명 등 항만 특화운영과 경제공동체를 통한 시장 확대를 새만금 국제공항의 적기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개발이 "민간중심의 용지 개발에서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되면서 우려곡절이 많았던 새만금사업이 비로소 안정 궤도에 올랐고, 9월이면 새만금개발공사의 새만금 현지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이전으로 새만금사업은 더 신속하고, 더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새만금이 원활해권 경제벨트의 중심에서 국가간, 산업간 협력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치권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몰카' 게 셋거라... 도, 공중화장실 점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예방활동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날 도내 288개 공중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다행히 점검결과 단 한 곳에서도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를 활용, 이용객이 비교적 많

은 화장실 위주로 이뤄졌다.

점검과 함께 화장실 이용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로 의심될만한 자국 등을 찾아 제거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민간건물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화장실 이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